

이슈브리프 532호  
(2024. 4. 1)

## 마크롱의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 논란과 프랑스·독일 간 갈등

### 제532호

임태훈 지역전략연구실



## 국문초록

지난 2월 27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상군 파병 가능성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솔츠 총리가 이를 단호히 부정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파장과 전략적 공조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 먼저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외교적 무리수를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있어 크고 독자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을 주도하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다. 둘째, 지난 2월 16에 체결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안보 협약에 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국내정치적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국회 비준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셋째, 올 6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친러성향의 극우 정당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솔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과 나토가 전쟁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둘째, 솔츠 정부의 저조한 지지도와 전범국의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뿌리내린 독일 국민의 해외전투병 파병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이다. 셋째, 실전 투입역량과 경험이 부족하여 우크라이나 파병 시 성공적인 활약을 장담할 수 없는 독일군의 상태 때문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크롱 대통령이 암시한 우크라이나 파병은 서방 주요국의 협조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최근 프랑스-독일 간 갈등은 지역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러시아의 승전저지를 위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의 지속적 발전은 불변이라는 사실이다.

핵심어 : 프랑스, 마크롱, 우크라이나 파병, 독일, 솔츠, 외교적 파장, 러시아의 승전저지,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의 지속적 발전

지난 2월 27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회의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황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은 유럽 정상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유럽 내 상당한 외교적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프랑스가 특수 동반자인 독일과 사전 조율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양국 간 전략적 공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본 글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 논란으로 인한 프랑스·독일 간 갈등을 조명함으로써 양국 간 불협화음의 배경과 내막을 살펴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향후 협력노선을 전망해본다.

### 우크라이나 전쟁 속 이례적인 프랑스와 독일 간 불협화음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독일은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외교적 보조를 꾸준히 맞추었다. 일례로 개전 이래 양국은 한목소리로 러시아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지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국 모두 개전 이후 화두가 된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sup>1)</sup>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중재국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르망디 포맷(Normandy Format)을 주도하기도 하였다.<sup>2)</sup> 이를 미루어 볼 때,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으로 인한 양국 간 외교적 엇박자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 1)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적 가입조건 충족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2) 크림반도 합병사태 이후 격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여 만든 4개국 협의체이다.

양국 간 전략적 공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現) 독일 집권 여당 사민당(SPD)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 중 하나인 미하엘 로트는 “오늘처럼 프랑스·독일 관계가 경색된 적이 없고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확고하게 이끌 사령탑(Führung)이 부재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의 전략적 노림수

그렇다면 왜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듯 외교적 무리수를 두면서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을 강행하였을까.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과의 특수 동반자 관계(Couple franco-allemand)를 매우 강조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sup>3)</sup>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은 고도의 정치·외교적 전략계산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크게 3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대외적으로 프랑스가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는데 크고 독자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을 주도하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다. 2차 대전 이래 유럽의 안보 질서가 나토와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이 오랫동안 굳어짐에 따라, 유럽 제1의 군사 대국이자 영국을 제외한 역내 유일한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역내 군사·전략적 역할과 주도성이 많이 퇴색되었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은 다소 모험적인 선택이 강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프랑스가 현 우크라이나 전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소망수임을 각인 시키고자 한다.

둘째, 대내적으로 지난 2월 16일에 체결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안보협약 비준에 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 속에서 사전에

3) 1963년 엘리제 조약 이래 프랑스에서는 독일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동맹관계를 뛰어넘는 연인관계로 묘사한다.

이를 국내정치적 쟁점으로 부상시키기 위함이다. 해당 협약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1991년 이후 확정된 영토수호를 지지하는 주된 골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프랑스 정당들의 큰 반대를 살 가능성이 크다.<sup>4)</sup>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 논란을 통해 해당 협약에 대한 논쟁에 일찍 불을 지피면서, 궁극적으로 이를 국회 비준에 유리한 정국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올 6월에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내 극우세력의 승리를 저지하고자 위함이다. 현재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의 정치적 지지도가 상승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정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을 통해 안보 불안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연합에 대한 여론의 주목을 흐트림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친러성향이기도 한 국민연합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자 한다.

### 솔츠 총리와 독일의 우크라이나 파병 반대 배경과 의도

독일의 솔츠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필요성 주장을 단호히 일축하고, 좌·우파를 막론한 독일의 모든 정파도 전반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완고하게 반대하는 데에는 크게 3가지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4) 특히, 국민연합(RN)과 극좌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그리고 프랑스 공산당(Parti communiste français)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정통 우파정당인 공화당(Les Républicains)의 일부도 무제한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다.

첫째, 독일과 나토가 전쟁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전 이래 독일은 파병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프랑스보다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였다. 일례로 독일은 역내 제1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국이다. 하지만 직접적 군사개입 배제는 독일의 일관된 우크라이나 지원정책의 핵심 기조로 남아있으며, 솔츠 총리는 이를 올해 대국민 신년 연설을 통해 재차 못 박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츠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언급에 쉽사리 동조한다면, 자신과 독일의 정치·외교적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둘째, 솔츠 정부의 저조한 지지도와 전범국의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뿌리내린 독일국민의 해외전투병 파병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이다. 집권 이후 경기후퇴와 가파른 물가상승 그리고 연정에 참여 중인 녹색당의 다소 급격한 친환경주의적 행보로 인해 솔츠 총리의 정치적 지지도는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친러성향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가파른 지지도 상승은 솔츠 총리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탈(脫) 나치화(Entnazifizierung) 과정에서 강화된 반전 평화주의도 큰 걸림돌이다. 일례로, 독일국민의 61%가 무기 지원 강화책의 연장선에 있는 자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Taurus)의 우크라이나 공급조차 반대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자칫 연정 붕괴까지 초래하는 정치적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실전 투입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독일군의 상태 때문이다. 사실, 독일군의 해외파병은 발칸반도, 지중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는 소규모임과 동시에 교전과는 거리가 먼 감시 활동과 현지 재건사업 중심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 독일군은 마크롱 대통령이 묘사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투입되어 러시아군과 전면전을 감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10여 년간 리비아 내전과 말리 내전 등을 통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보유하고 2-3주 내 15,000명의 지상군을 파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프랑스군과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독일군의 전투력이 신속히 개선되지 않는 한 솔츠 총리에게 전투병 파병은 위험 부담과 실패 가능성이 작지 않은 선택지이고, 오히려 무기와 탄약 공급증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안정적인 카드이다.

### **맺는말 : 러시아의 승전저지를 위한 양국 간 전략적 공조는 불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는 전쟁 초기에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이었던 플로랑스 파를리도 인정한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모를 리가 없으며, 속으로는 대규모 파병보다는 자국이 보유한 핵억지력에 의한 힘의 균형을 최후의 승부수로 고려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프랑스군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점은 최근 불거진 프랑스·독일 간 갈등이 매우 일시적 내지는 지역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은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는 한 지속·발전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5일에 마크롱 대통령과 솔츠 총리는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와의 3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러시아의 승전저지를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단결을 서로 확인하였다. 이는 대외적으로 프랑스·독일 간 특수 동반자 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번 프랑스

독일 간 갈등을 러시아의 승전저지에 대한 양국 그리고 유럽의 전략적 균열 내지는 변곡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